‘훈훈한 대한민국 공동체’

박준영 전남지사 1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호남 패배주의 극복할 것” … 지사직 사퇴 여부도 표명

오는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선 슬로건과 대표 공약은 무엇일까. 박 지사는 12일 개인 간 불신을 해소하고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스스로 윤리경영에 나서 약자를 보호하며, 남·북이 같이 번영하는 ‘훈훈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특히 출정식에서 ▲한반도 평화관리체제 구축 방안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생방안 ▲경제적 약자 배려 등 사회통합 방안 ▲미래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 등 국가발전 비전을 담은 대선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12일 “서민의 생활경제를 살리는 ‘박준영식 민생경제 정책’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를 해결하고, 인류공통의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남북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국내외 투자가 촉진돼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은 안된다’는 정치공학적 고정관념이 잦은 물갈이로 이어져 호남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대선에서 호남후보로 당당히 당선돼 호남 패배주의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지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너무 갈라져 있고 또 서로 간 불신하고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며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슬로건을 15일 공식 출마선언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개혁 등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혜택을 본 재벌과 대기업들이 스스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사회인만큼 혁명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당내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해 “대선 후보나 대표 선출에서 당원들이 너무 소외되는 만큼 당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의 방법은 특정 계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대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대선 후보 가운데) 저 혼자만이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실현해왔던 가치에 대해서도 저는 흔들림이 없고 민주당의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도지사직 사퇴문제와 관련해선 “각 지사들이 갖고 있는 위치나 각 도마다 처한 현실이 각기 다르고 또한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제가 도민들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되 가능하면 15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민주당이 집권하기에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항상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오던 터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안 원장과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간에 민주당이 민주당의 길을 먼저 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예술인 모임인 ‘밝은 세상을 희망하는 예술인’ 회원들이 11일 무안군 남악리 전남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통령 출마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호남민 구심점 돼라” vs “지사직 부터 사퇴를”

박준영 대선출마 엇갈린 지역민심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권 행보와 관련, 찬반으로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호남권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박 지사가 ‘포스트 DJ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남도의 산적한 현안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밝은 세상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지난 11일 무안군 남악리 전남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통령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지사는 합리적 진보와 따뜻한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로 편가르기식 이념 대결보다는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전남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중에서 박 지사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현재 1700여명이 박 지사 지지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12일 전남도의회 통합진보당 이정민 의원 등 5명과 무소속 도의원 2명 등은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출마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는 출마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의원, 단체장의 무분별한 중도사퇴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임기내 정치적 행위는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지사가 대권 도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도민에게 사죄하고 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어떻게 되나

직선제 폐지 하려면 학칙 개정 … 시간상 불가능

2순위 후보 선임도 전례 없어 … 재선거 불가피

전남대학교 박창수 총장 당선자가 사퇴 의사를 내비치면서 15대 총장 선임이 미궁에 빠졌다.

전남대는 지난달 총장 당선자로 박창수 교수와 이병택 교수를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총장 선거와 관련해 1·2순위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총장 선임에 이상 기류가 끼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창수 당선자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내비쳐 향후 총장 선임 절차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박 당선자 사퇴로 인해 홀로 남은 2순위 이병택 후보의 총장 선임 여부다.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 후보의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에 지난 1988년 전후로 총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모든 대학들이 총장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모두 1위 후보자만을 최종 선임했기 때문이다. 간혹 1위 후보가 결격 사유가 있어 자격 상실의 상황도 벌어졌지만, 그 경우도 1위 대신 2위 후보가 선임된 사례는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는 구성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후보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순위가 자격을 잃었더라고 2순위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재선거 실시나 교과부 방침대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추진하는 등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우선 직선제 폐지 후 공모제 추진은 일정상 무리다.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남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전남대 학칙 개정(제83조, 규정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평의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1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개정안의 공고·공포는 15일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즉 대학평의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윤수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8월 16일까지는 직선제 폐지에 따른 공모제 추진도 불가능하다. 물론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이 강해 개정안 작업이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결국 전남대는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하다. 다만 8, 9월로 코앞에 다가온 각종 대학 평가에 대비해 불이익을 면하려면, 교과부의 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야 한다. 전략상 재선거 전에 다음(제16대) 총장선거부터는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협약을 교과부와 체결하면 된다.

교과부는 “전남대 총장 선출 방법은 전적으로 대학의 몫”이라며 “총장 당선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교과부는) 오해 살 소지가 있는 어떤 행위나 입장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주선 17일 출석 통보

광주고법, 법적 절차 착수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2일 박 의원의 변호인과 협의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하고 박 의원을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 차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심 재판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스타일 완전히 죽이는군